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투명성 강화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사회 구성 방식 등 변경 사회 주체 참여 확대 담아 방송 개혁 제도적 출발점 방문진법, 본회의 상정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직후 이루어졌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방식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사회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이다. KBS 이사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는 각각 13명으로 확대된다. 이 중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비율은 40%로 제한된다. 나머지 이사들은 시민사회, 언론 관련 기관 등 외부 독립 기구의 추천을 통해 선임된다. 정치권의 직접적인 개입을 줄이고, 방송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의 보도 책임(예: 보도국장 등)을 선임할 때, 내부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의무화한 것도 눈에 띄는 조항이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편향적 인사 임명을 막고 내외부의 자율성과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특정 노조나 단체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돼 방송의 정치적 편향이 심화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단일안 형태로 공개된 뒤 일주일도 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고, 곧바로 본회의가

지 올라왔다. 이례적인 속도전이었다는 평가 속에,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법 개정은 오랜 시간 논의돼 온 공영방송 개혁의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목표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구성될 이사회 운영과 사장 선임 절차를 통해 가늠될 전망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을 지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온 방송

장악 시도와 사회적 혼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남은 입법 과제도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초반 신속한 입법 추진을 통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편, 방송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만호 기자

“농민 땀·눈물 헹되지 않도록”

민주 이원택 의원, 농업민생 5법 제정 핵심 역할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농민을 위한 ‘농업민생 5법’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통해 농민의 권익옹호에 큰 기여를 했다.



되길 바란다”며 “농업은 단지 산업이 아니라 우리의 식량주권,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농업을 비용으로만 계산하며 정책의 우선순위에 미치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농민 곁을 지켰다”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시행령 정비, 제도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침내 농업민생 5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며 “농민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헹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농업민생 5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우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농어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한 법안들이다.

지역구인 군산·김제·부안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이 의원의 취임 이후 줄곧 농민 소득 안정과 농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이번 농업민생 5법 역시 지역 농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현안을 국회에 전달해 만든 성과라는 평가다.

이원택 의원은 글 말미에 “농어민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특히 이원택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간사로서 전체 법안 논의 과정에 농민단체 및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내용을 조율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재발의를 주도해 왔다.

이 의원은 “이 법들이 농어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공덕 재해위험지구 주민-행정간 가교역할 ‘특목’

이명연 도의원, 개선 정비사업 설명회 참석해 주민 목소리 경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과 행정간 가교역할을 토크해 내고 있다.



“공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전주시 금상동에서 완주군 소양면으로 이어지는 공덕세천의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연되었던 문제를 전주시와 완주군이 상생 협약을 통해 해결하는 모범 사례다. 전주시가 공사를 총괄하고 완주군이 보상 등 행정절차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이명연 의원은 5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공덕경로당에서 열린 ‘공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의원은 “총사업비 254억원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전주시의회 윤해정 의원과 전북자치도 및 전주시 재난안전본부 책임자들이 함께했다. /이만호 기자

이명연 의원은 5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공덕경로당에서 열린 ‘공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사업의 만

K2 전차 수출 계약... K방산 세계화 박차

안규백 국방부장관,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폴란드 방문

안규백 국방부장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 동대문갑, 전북 고창 출신)이 취임 후 첫 국방외교 일정으로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국방 및 방위산업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형 무기체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는 데 주요 임무를 띠고 있다. 안 장관은 첫 일정으로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사스키 공원에 위치한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했다. 이후 폴란드 현지에 진출해 활동 중인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 사업 진행 상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안 장관은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치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업들의 사기 진작에 힘을 실었다. 다음 날 안 장관은 폴란드 클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특히 이날 회담 직후 열린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은 이번 방문의

핵심 일정 중 하나였다. 계약 규모는 K2 전차 180대, 지원차량 81대로 약 65억 달러(한화 약 9,03조원)에 이른다. 이는 우리 방위산업 수출 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로,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안 장관은 서명식 후 “K2 전차는 폴란드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양국이 평화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있다는 상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장관은 현지에서 K2 전차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마르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과 직접 둘러보고, 양국 기술협력의 현주소를 확인했다. /이만호 기자

김만기 도의원, 수산부산물 관리·재활용 촉진 체계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이 지난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

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수산부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수산부산물 실태 조사 추진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지원사업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